

정보통신산업의 개혁 추진과 성장 전망

최근 중국의 정보통신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중국 경제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정보통신부문의 고속 성장에 발맞추어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부 독점체제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개혁·개방 추진과 함께 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중국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개혁·개방정책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통신부문 개혁·개방으로 경쟁력 제고

중국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추어 개혁 필요성을 절감,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2 통신사업자를 설립, 독점체제의 비효율성과 폐해를 시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개방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경쟁체제로의 전환 및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중국 통신산업 개혁·개방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3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통신부문의 '정기분리(政企分離)' 개혁¹⁾ 추진이다. 1979년 경제전반에 관한 개혁·개방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통신산업은 정부의 핵심 기간산업이라는 명목 하에 철저히 정부의 통제하에 운영되어 왔다. 즉, 중국 통신산업은 정부부처인 郵電部(현 情報産業部)²⁾ 산하 電信總局에서 독점적으로 경영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국 통신사업 부문을 정부조직에서 떼어내는 정기분리 작업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94년 郵電部에서 中國電信(China Telecom)이 분리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郵電部는 여전히 中國電信의 인사와 경영, 전화요금 등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고, 신규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었다. 1980

1) 개혁·개방 초기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은 권한의 하방과 기업 이익의 내부유보 허용이라는 이른바 '放權讓利'에 있었음. 1990년대 들어 이러한 방권양리식 개혁과 함께 주식제 추진, 기업간 M&A, 적극적인 파산제도 시행 등 현대적 기업제도의 도입에 힘쓰고 있음. '政企分離'는 이러한 기업개혁의 틀 속에서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경영주체가 되어 영위하는 사업단위를 기업으로 분리하여 상기의 개혁작업에 병행하는 형식으로 전개됨.

2) 1998년 3월, 정부기구 축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郵電部와 電子工業部가 합병되어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가 신설됨.

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통신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점체제의 비효율과 폐해가 누적되어 왔다. 지나치게 높은 가입비와 사용료, 설치기간의 과다 소요 등의 서비스가 개선되지 못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었다.

제2단계는 제2통신사업자인 中國聯通(China Unicom)을 설립함으로써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시기이다. 中國聯通은 전자공업부를 중심으로 전력공업부, 철도부, 13개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이 연합하여 출자한 기업으로 1995년 7월부터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럽표준방식(GSM)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연통은 1998년 말 이동통신부문에서 중국전체의 6%, 호출기부문에서는 5.3%에 그쳐 중국전신의 경쟁상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보산업부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연통의 사업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전신의 독점은 계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중국연통을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통신 사업자로 선정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의거해 중국연통도 2003년까지 약 100억 달러를 투입, 2,8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현재 5%에 불과한 이동통신부문 시장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연통은 CDMA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유수의 2~3개 CDMA 시스템 공급회사와 접촉 중이다.

제3단계는 1999년 들어 중국의 WTO 가입에 대비키 위해 중국 통신시장의 개방과 이에 따른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사업부문이 과도히 집중되어 있는 中國電信을 4개 기업으로 분할하고 중국연통의 시장진입 확대 허용이라는 통신업체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중국전신의 분할은 작년 3월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기존 중국전신의 4개 사업부문을 별도 기업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① 시내 및 장거리 전화사업자인 中國電信集團公司, ② 기존 GSM 방식의 中國移動通信集團公司, ③ 호출기 사업자인 中國尋呼通信集團公司, ④ 위성통신 사업자인 中國衛星通信集團公司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말 이러한 계획안이 약간 수정되어 확정되었다. 중국전신을 당초안대로 분리하되 호출기사업 부문을 중국연통에 흡수합병시키는 한편, 중국연통을 CDMA 방식의 이동통신 사업자로 지정, 중국연통의 업무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표> 중국 통신정책의 단계별 개혁·개방정책 추이

	시기	통신사업 부문				정책 방침
		지역	장거리	국제	이동통신	
1 단계	1993 이전	- 郵電部에 의해 독점				- 정부 독점체제로 운용 · 외자 진입 불가
	1994	- 郵傳部の 통신사업부문이 '中國電信'으로 분리				- 政企分離
2 단계		- 聯通 설립			- 연통 설립	- 부분적 경쟁체제 도입
	1995				- 연통 서비스 개시 - 장성통신 설립	
	1997	- 연통, 전화서비스 개시(天津)				
	1998				- 長城通信 일부지역 (廣州, 北京, 上海, 西安) 시험 서비스	
3 단계	1999 이후		- 연통: 장거리 전화사업 참여 선언		- 연통: CDMA 사업자로 선정 - 世紀通信(舊장성통신): 河北省 서비스 개시	- 전면적 경쟁체제 도입 · 중국전신 분할 · 대외개방 허용

이러한 가운데 작년 말 世紀通信도 CDMA 사업에 전격 참여했다. 세기통신은 중국 군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長城通信의 후신이다. 장성통신은 원래 1995년에 설립, 1996년부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4개 도시에서 CDMA 시범망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중국연통을 CDMA 사업자로 지정하자 군부가 이에 반발하고, 세기통신이라는 이름으로 허베이(河北)에서 전격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장거리 전화와 국제통신은 중국전신에게만 서비스가 가능함으로써 중국전신의 전반적인 경쟁우위 입지는 여전하였다.³⁾

이러한 통신부문의 경쟁 확산은 지난해 11월 미국과의 WTO 가입 조건의 하나로 통신시장의 개방을 허용키로 하면서 자국내 통신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통신시장 개방의 골자는 최대 50%까지의 외국투자 지분 허용과 지역 제한의 점진적 철폐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부가통신서비스는 2년 후, 호출서비스는 3년 후에 50%까지 확대하며, 둘째, 2년 내 호출 및 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역 제한 폐지, 5년 내 이동통신사업 지역 제한 폐지 및 6년 내 유선통신 사업 제한을 폐지하며, 셋

3) 최근 중국정부의 통신산업에 대한 경쟁체제 전환 추진에 발맞추어 중국전신의 독점부문이었던 장거리 전화사업에 대해서 연통이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조만간 이 부문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3개 도시에 대해서는 WTO 가입 즉시 외국기업에 대한 상기 통신서비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

중국정부의 통신분야 지원은 제9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96~2000)부터 본격화되었다.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때 통신산업은 21세기 주도산업으로 부각될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8·5계획(1991~95년)중 정부의 통신분야 투자규모는 316달러였으나 9·5계획 기간 중에는 이보다 약 두 배 많은 605억 달러로 잡고 있다. 1998년 12월에는 정보통신산업 발전 전략 수립과 함께 매년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중국의 정보통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문제는 자금 확보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은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량의 재정적자 확대를 용인하고서라도 국채 발행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왔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 심화에 따른 금융위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당면한 국유기업 및 금융기관 부실 해소, 인프라 등 공공지출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지출도 빠듯한 상황에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명목으로 재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는 현실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외자유치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당초 9·5계획 기간 중 투입될 투자자금 가운데 약 30%는 외자유치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었다. 2001년부터 시작되는 10차 5개년 계획중 통신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거대시장으로 부상될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장지속 전망에 따른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필요

중국 고정통신(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이미 1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이래 연평균 40% 가까운 성장이다.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빨라 연평균 가입자수 증가율이 무려 160%에 달한다. 1999년 8월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이미 3,383만 명에 달함으로써 미국, 일본에 이은 3위의 이동통신 대국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그러나 보급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고정통신은 10%, 이동통신은 2%에 불과하다. 이는 향후 성장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이 중국연통을 중심으로 CDMA 방식의 이동통신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이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삼성, 현대, LG 등 국내 주요 휴대폰 생산업체들은 이미 중국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시작 단계인 CDMA 방식이 점차 확산될 경우, CDMA 사업자로 선정된 외국기업은 중국시장이 향후 수년간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업체의 적극적인 진출계획과 중국업체와의 제휴·합작을 통한 시장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업체가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全善俊】